



Received: 2026/03/06  
Revised: 2026/03/16  
Accepted: 2026/03/24  
Published: 2026/03/31

**\*Corresponding Author:**

Jong Ha Kim

70 Hannam-ro, Daedeok-gu, Daejeon 34430, Republic of Korea

Tel: +82-42-629-8439

E-mail: jong-ha44@hanmail.net

# 전환기 북극 안보환경과 대한민국의 북극정책: 거버넌스 제약, 정당성, 그리고 해군 역할의 재구성

## The Evolving Arctic Security Environment and South Korea's Arctic Policy: Governance Constraints, Legitimacy, and the Shift in Naval Roles

송상래<sup>1</sup>, 김종하<sup>2\*</sup>

<sup>1</sup>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박사과정

<sup>2</sup>한남대학교 정치언론국제학과 교수

Sang Rae Song<sup>1</sup>, Jong Ha Kim<sup>2\*</sup>

<sup>1</sup>Ph.D. student, Department of Politics & Communication Studies, Hannam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Politics & Communication Studies, Hannam University

**Abstract**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북극 지정학과 거버넌스 재편 속에서 대한민국 북극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해군의 역할·임무·능력 재구성 원리를 제시한다. 분석결과 북극의 위협은 군사·거버넌스·환경·사회적 위험이 중첩된 회색지대형 해양안보 문제로 나타나며, 한국의 북극정책은 정책 목표와 현장 실행 역량 사이에 전략적 공백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군의 우선 임무로 수색·구조, 해양영역인식, 재난대응, 규범 기반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한 저자극 협력형 패키지를 제시한다.

This study presents the principles for reconfiguring the roles, missions, and capabilities of the Republic of Korea (ROK) Navy to support national Arctic policy amid the realignment of Arctic geopolitics and governance following the Ukraine War. The analysis identifies that Arctic threats manifest as gray-zone maritime security issues where military, governance, environmental, and social risks overlap. Concurrently, it confirms a strategic gap between policy objectives and on-site execution capabilities in South Korea's Arctic policy. To address this, the study proposes a non-provocative cooperative package as the Navy's priority missions, focusing on search and rescue (SAR),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disaster response, and rules-based military diplomacy.

**Keywords**

북극(Arctic), 북극정책(Arctic Policy),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거버넌스(Governance), 정당성(Legitimacy), 해군 역할(ROK Navy Strategy)

### 1. 서론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해빙(海氷)의 가속화는 북극을 더 이상 '단절된 변방'이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신규 항로·자원·규범 경쟁이 중첩되는 전략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는 북극을 환경적 취약성과 전략적 기회가 동시에 응축된 공간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특히 북극권에는 상당한 규모의 미발견·미개발 탄화수소 자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1,2], 북극항로가 상용화될 경우 아시아-유럽 간 해상 운항거리 단축을 통해 물류·공급망 구조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예상된다[3]. 이러한 변화는 에너지 수급 다변화, 해운·조선 및 물류 경쟁력 제고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기회이자 중장기 국가이익의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의 북극 온난화와 해빙 감소는 북극의 접근성과 경제적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재난·오염·항행안전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4,5]. 그러나 북극의 변화는 단순히 환경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은 군사적 상징성과 전략적 경합

의 밀도가 높아졌고, 기존의 협력 중심 질서는 외부 지정학의 충격에 의해 재조정되고 있다[6,7]. 이로 인해 북극은 과학과 환경의 공간인 동시에 안보와 질서의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비북극권 국가의 정책 설계에도 직접적 함의를 갖는다. 북극 거버넌스는 더 이상 연안국 중심의 폐쇄적 질서로만 작동하지 않으며, 전문가 네트워크, 국제규범, 준외교적 협력장이 상호 얽힌 복합적 장으로 진화하고 있다[8]. 따라서 비북극권 국가의 참여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나 외교적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제도적 정당성과 수용 가능성을 입증하는 정치적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9,10]. 대한민국 역시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 이후 북극 활동을 제도화해 왔으나, 정책의 현장 실행을 떠받칠 해양안보 수단과 해군 역할은 상대적으로 충분히 이론화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문제의식은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한국의 북극정책은 과학협력, 산업참여, 규범 준수, 국제협력의 차원에서 확장되어 왔지만, 북극의 안보 환경이 군사·거버넌스·환경 리스크가 결합된 복합 위험 구조로 재편되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해군의 역할 설계 원리는 여전히 불명확하다. 특히 비북극권 국가의 군사적 존재는 쉽게 긴장 고조의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극에서의 해군 역할은 단순한 전력 투사보다 정당성·제도 적합성·긴장관리의 원리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11].

이에 본 연구의 총괄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심화된 지정학적 긴장과 북극 거버넌스의 재배치 속에서, 대한민국의 북극정책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해군의 역할·임무·능력은 어떤 원리와 근거에 의해 재구성되어야 하는가. 이를 위해 세 가지 세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첫째, 최근 북극의 안보환경 변화는 군사적 긴장, 거버넌스 제약, 환경·사회적 위험의 범주에서 어떻게 재구성되고 결합하는가? 둘째, 대한민국의 북극정책은 어떠한 목표와 수단의 조합을 통해 추진되어 왔으며, 정책목표와 해군의 실행역량 사이에는 어떤 전략적 공백이 존재하는가? 셋째, 비북극권 국가로서 요구되는 정당성과 긴장관리의 조건을 고려할 때 한국 해군의 역할·임무의 결합은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화 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첫째, 북극 안보를 군사문제에 한정하지 않고 거버넌스와 환경위험을 포함하는 복합안보 문제로 재구성한다. 둘째, 북극정책과 해군전략 사이의 연계 실패를 전략적 공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셋째, 비북극권 국가의 해군 역할을 저자극 협력형 임무 패키지로 개념화함으로써 한국의 북극 참여를 보다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 2.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본 연구는 북극 안보환경의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환경안보, 거버넌스 재편, 정당성의 세 개념축을 결합하였다. 첫째, 환경안보 관점은 북극의 위험이 단순한 군사충돌이 아니라 기후변화, 재난, 자원활동, 인간안보 문제가 얽힌 복합적 위협임을 보여준다[4,5]. 둘째, 거버넌스 재편 관점은 북극이 고정된 제도질서가 아니라 다층적 행위자와 지식 네트워크를 통해 재구성되는 지역임을 강조한다[9,12]. 셋째, 정당성 관점은 비북극권 국가의 참여가 능력 보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제도 규범과 긴장관리 논리에 부합해야 함을 시사한다[9,10].

이러한 논의를 종합하면, 북극에서의 안보는 전통적 군사위험의 선형적 증가라기보다 복수의 위험이 중첩되는 회색지대형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북극의 군사화는 단순한 무력경쟁이 아니라 지역 통치, 주민 통제, 상징정치와 결합하여 작동할 수 있으며[7], 해양 공간은 고정된 영토가 아니라 관리·감시·예측의 논리가 중첩되는 다차원적 안보 공간으로 구성된다[11]. 따라서 한국 해군의 북극에서의 역할은 전력 중심 사고보다, 제도적 수용성 속에서 안전과 질서 유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다음과 같다. 외부 독립변수는 지정학적 긴장 고조, 북극 거버넌스 기능 약화, 환경 변화 심화이다. 이들 요인은 한국의 북극 활동을 둘러싼 위험 인식을 변화시키며, 동시에 비북극권 국가의 행동 가능 범위를 제약한다. 이러한 영향은 정당성 전략과 제도 적합성이라는 매개요인을 통해 정책수단 조합 및 해군 역할 설계라는 종속변수로 연결된다. 다시 말해, 외부 충격이 직접적으로 해군 역할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격이 어떠한 제도 환경과 정당성 조건 속에서 해석되는가가 실제 역할 설계의 방향을 규정한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하는 질적 단일사례연구이다. 분석 기간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는 한국의 북극 참여가 본격적으로 제도화된 시기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극 질서가 급격히 재조정된 시기를 함께 포괄하기 위함이다. 자료는 정부의 북극 관련 전략문서와 법·제도 문서, 해군 및 국방 관련 공개자료, 북극이사회 및 국제기구 문서, 그리고 북극 거버넌스와 안보를 다룬 학술·정책 문헌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은 세 가지다. 첫째, 내용분석을 통해 시기별로 북극 위협 인식, 정책수단, 해군 역할 관련 담론의 분포와 변화를 확인하였다. 둘째, 담론분석을 통해 한국의 북극 참여가 어떠한 정당화 논리로 서술되는지, 그리고 해군 역할이 어떤 언어로 제한되거나 확장되는지를 해석하였다. 셋째, 과정추적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외부 충격이 북극 거버넌스 논의와 한국의 정책 맥락에 어떤 전환 효과를 미쳤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질적 설계는 사례의 인과 논리를 명시하고 해석의 개방성을 줄이는 데 유용하며, 질적 연구의 증거 제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석 범주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13,14].

## 4. 분석 결과

### 4.1 북극 안보환경의 재구성

첫째, 북극의 군사적 긴장은 양적으로보다 상징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북극은 여전히 전면전 가능성이 상시화된 공간이라기보다 억제와 존재감의 정치가 작동하는 지역이지만, 최근에는 전략자산의 가시성, 군사기반시설의 의미, 군사담론의 빈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5,7]. 이는 북극을 협력의 예외공간으로 상정했던 과거 인식을 약화시킨다.

둘째, 거버넌스 차원의 제약이 확대되고 있다. 북극 질서는 전통적으로 다자협력과 기능적 협의에 의존해 왔으나, 최근에는 제도 간 연계의 취약성, 참여주체 간 이해 차이, 외부 지정학의 파급 효과가 두드러진다[8,12]. 특히 북극은 연안국 중심의 제도와 초국가적 전문가 네트워크가 공존하는 공간이므로, 협

력의 지속 가능성은 단지 공식기구의 존속 여부가 아니라 비공식적 지식·외교 네트워크의 유지 여부에도 달려 있다[8].

셋째, 환경·사회적 위험은 오히려 더 빠르게 증대하고 있다. 해빙 감소와 북극 증폭은 자연환경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항행, 자원탐사, 연구활동의 확대는 구조·재난대응·오염관리 수요를 증가시킨다 [4,5]. 이 위험은 군사위협과 별개가 아니라, 거버넌스 기능 약화와 결합할 때 더 큰 복합 위협으로 전환된다.

결국 북극의 안보환경은 군사적 긴장, 거버넌스 제약, 환경·사회적 위험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증폭되는 구조로 이해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한국이 직면하는 회색지대형 해양안보 위협으로 개념화한다. 이는 전통적 적대행위보다 낮은 강도의 압박, 불확실한 책임 소재, 이중용도 활동, 제도적 공백을 통해 정책 실행을 제약하는 위협이다.

### 4.2 한국 북극 정책의 특징과 전략적 공백

한국의 북극 정책은 대체로 네 가지 목표, 즉 규범 준수, 과학협력, 산업참여, 국제협력의 병렬적 추구로 요약된다. 이는 비북극권 국가로서 과도한 전략화보다 책임 있는 참여 이미지를 형성하려는 접근과 부합한다. 실제로 북극 거버넌스는 참여 주체의 이해관계보다 그 참여가 어떤 지식, 규범, 네트워크를 통해 정당화되는가에 의해 평가되는 경향이 강하다[8,9].

문제는 정책목표와 실행수단 사이의 비대칭성이다. 한국의 북극정책은 목표 수준에서는 다차원적이지만,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해양영역인식, 안전지원, 위기대응, 연합협력 설계는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하였다. 특히 북극은 제도 참여와 실제 운용 역량이 분리되기 쉬운 공간이므로, 정책의 신뢰성은 단지 문서상 비전이 아니라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어떤 지원능력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이 점에서 한국은 정책은 앞서 있으나 이를 떠받칠 현장 지원역량은 후행하는 전략적 공백을 보인다.

또한 비북극권 국가의 해군 활동은 높은 정치적 민감성을 가진다. 북극에서 군사적 존재감은 쉽게 위협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정책 정당성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6,10]. 따라서 한국의 북극정책은 단순한 능력 확대보다, 어떠한 임무가 제도적으로 수용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저자극적인가를 기준으로 해군의 역할을 선별해야 한다.

#### 4.3 해군 역할의 우선순위와 재구성 원리

분석 결과, 한국 해군의 북극에서의 역할은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당성이다. 북극 연안국과 국제사회가 수용 가능한 공공재 제공 형태여야 한다. 둘째는 제도 적합성이다. 국제규범, 다자협력 메커니즘, 북극 거버넌스의 기능적 수요와 접합되어야 한다. 셋째는 긴장관리이다. 가시적 군사화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국의 정책 이익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해군의 우선되는 역할은 전투임무보다 저자극 협력형 임무 패키지로 정리된다. 첫째, 수색·구조와 재난대응 지원은 환경·사회적

위험 증가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며, 비북극권 국가가 기여할 수 있는 대표적 공공재이다[5]. 둘째, 해양영역 인식과 정보공유 협력은 항행안전, 기상·해양 정보, 위험 예측, 원격 지원을 포함하는 이중용도 영역으로, 과학협력과 안보지원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진다[11]. 셋째, 규범 기반 군사외교와 다자협력 지원은 존재감 과시가 아니라 제도 적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8,12]. 넷째, 제한적 보호·대응 역량은 투명성과 다자연계 원칙 아래에서만 보완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 5. 정책적·이론적 함의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북극 안보를 전통적 군사안보의 하위 범주가 아니라 환경 변화, 거버넌스 재편, 정당성 정치가 결합된 복합안보 문제로 파악해야 함을 보

**Table 1.** Types of threats in the Arctic security environment and implications for Korea

Threat Category	Key Details	Direct Implications for Korea	Policy & Navy Response
Military Tension	Increased visibility of strategic assets, enhanced symbolism of military infrastructure, and ongoing low-intensity military competition	Increased possibility of misinterpreting Arctic activities as military; expanded political sensitivity of the Navy's role.	Prioritize cooperative missions and low-stimulus tasks over direct military power projection.
Governance Constraints	Instability in multilateral cooperation, fragmentation between formal and informal networks/institutions, and competition for legitimacy in participation.	Need to secure institutional suitability as a non-Arctic state; increased diplomatic costs for policy implementatio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strengthen linkage between multilateral cooperation and military diplomacy.
Environmental & Social Risks	Sea ice reduction, increased navigation, and expanded demand for search, rescue, and pollution management.	Expanded demand for safety support; increased need for joint civil-military responses.	Accumulate capabilities centered on SAR (Search and Rescue), disaster response, and 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 This table was crea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previous studies.

**Table 2.** ROK Navy role packages and step-by-step capability roadmap

Category	Priority Mission	Core Functions	Implementation Timeline
Phase 1	Maritime Domain Awareness (MDA) & Info Sharing	Linking navigation safety info; Cooperation on meteorological/oceanic risk info; Data connection between relevant agencies.	Short-term (1-3 years)
Phase 2	Search and Rescue (SAR) & Disaster Response Support	Participation in rescue exercises; Emergency response cooperation; Refinement of remote support systems.	Short-to-Mid-term (5 years)
Phase 3	Norm-based Military Diplomacy & Multilateral Cooperation	Cooperation on maritime safety agendas;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norms; Participation in non-combat sectors of combined exercises.	Mid-term (3-7 years)
Phase 4	Limited Protection & Response Capabilities	Polar adaptation training; Remote operation support; Transparency-based protection and support capabilities.	Mid-to-Long-term (10 years)
Phase 5	Sustainable Arctic Support System	Establishing a legal-diplomatic-security linkage platform; Securing an integrated multi-agency operational system.	Long-term (7-15 years)

※ Table 2 was creat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previous studies.

여준다. 특히 북극의 질서는 영토와 주권의 문제만이 아니라, 어떤 지식과 제도가 지역을 정의하고 관리하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8,10]. 이러한 점에서 비북극권 국가의 참여는 단순한 외연 확장이 아니라, 규범과 네트워크 속에서 승인받는 위치짓기의 과정이다.

정책적으로는 다음 세 가지 함의가 도출된다. 첫째, 한국의 북극정책은 과학·경제·외교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위협 유형별 대응 논리를 갖춘 통합적 설계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해군의 역할은 존재감 확대보다 안전, 구조, 정보, 규범 기반 협력에 집중함으로써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북극 대응 역량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축적해야 하며, 초기에는 제도 참여와 정보협력, 이후에는 안전지원과 훈련, 장기적으로는 법·외교·안보를 연계한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발전해야 한다.

## 6. 결론

본 연구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변화한 북극 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북극정책을 지속가능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해군의 역할 재구성 원리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북극의 위협은 군사적 긴장만이 아니라 거버넌스 제약과 환경·사회적 위협이 결합된 회색지대형 위협으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둘째, 한국의 북극정책은 규범 준수, 과학협력, 산업참여, 국제협력을 병렬적으로 추구해 왔으나, 이를 현장에서 지원할 해군의 실행역량과는 일정한 전략적 공백이 존재하였다. 셋째,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해군 역할은 전력투사보다 정당성, 제도 적합성, 긴장관리의 기준을 충족하는 저자극 협력형 임무 패키지로 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컨대, 한국의 북극정책은 더 이상 외교·과학 중심의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실제 정책 실행을 뒷받침할 안전지원과 해양안보 역량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은 북극의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수색·구조, 해양영역인식, 재난대응, 규범 기반 군사외교를 중심으로 점진적이고 투명하게 구축되어야 한다. 이는 비북극권 국가로서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수용 가능한 북극 해양전략의 방향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공개문서 중심의 질적 분석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정책결정자와

군 실무자 인터뷰, 타 비북극권 국가와의 비교연구, 임무별 세부 능력소요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론을 보다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Donald L. Gautier, Kenneth J. Bird, Ronald R. Charpentier, Arthur Grantz, David W. Houseknecht, Timothy R. Klett, Thomas E. Moore, Janet K. Pitman, Christopher J. Schenk, John H. Schuenemeyer, et al., 'Assessment of Undiscovered Oil and Gas in the Arctic,' *Science*, VOL. 324, NO. 5931, 2009, pp. 1175-1179.
- [2] Kenneth J. Bird, Ronald R. Charpentier, Donald L. Gautier, David W. Houseknecht, Timothy R. Klett, Janet K. Pitman, Thomas E. Moore, Christopher J. Schenk, Marilyn E. Tennyson, & Craig J. Wandrey, *Circum-Arctic Resource Appraisal: Estimates of Undiscovered Oil and Gas North of the Arctic Circle*, U.S. Department of the Interior & U.S. Geological Survey, U.S. Geological Survey Fact Sheet 2008-3049, 2008.
- [3] 황진희, 엄선희, 허소영, 북극해 활용전략 연구, 서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0.
- [4] Hervé Douville, 'Robust and Perfectible Constraints on Human-Induced Arctic Amplification,' *Communications Earth & Environment*, VOL. 4, 2023, Article 283.
- [5] Tanya A. Lemieux, Jackson D. R. Coles, Anne L. Haley, Michelle L. LaFlamme, Sara K. Steel, Kara M. Scott, Jennifer F. Provencher, Courtney Price, Joseph R. Bennett, et al., 'Persistent and Emerging Threats to Arctic Biodiversity and Ways to Overcome Them: A Horizon Scan,' *Arctic Science*, VOL. 11, 2025.
- [6] Nikolaj Kornbech, Olaf Corry, & Duncan McLaren, 'Securing the 'Great White Shield'? Climate Change, Arctic Security and the Geopolitics of Solar Geoengineering,'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60, NO. 2, 2024, pp. 286-307.
- [7] Vladislava Vladimirova, 'Continuous Militarization as a Mode of Governance of Indigenous People in the Russian Arctic,' *Politics and Governance*, VOL. 12, 2024, Article 7505.
- [8] Merje Kuus, 'Between an Archipelago and an Ice Floe: The Know-Where of Arctic Governance Expertise,' *Polar Record*, VOL. 59, 2023, Article e10.
- [9] Vesa Väättä, 'Investigating the Particularities of Regionalization: Contested State-Federal Relations and the Politics of Alaska's Arctic Policy,' *Geografiska Annaler: Series B, Human Geography*, VOL. 101, NO. 3, 2019, pp. 171-186.
- [10] Mark B. Salter, 'Arctic Security, Territory, Population: Canadian Sovereignty and the International,' *International Political Sociology*, VOL. 13, NO. 4, 2019, pp. 358-374.
- [11] Barry J. Ryan, 'Security Spheres: A Phenomenology of Maritime Spatial Practices,' *Security Dialogue*, VOL. 46, NO. 6, 2015, pp. 568-584.

[12] Donald R. Rothwell, 'Polar Lessons for an Arctic Regime,' *Cooperation and Conflict*, VOL. 29, NO. 1, 1994, pp. 55-76.

[13] Melissa Freeman, Kathleen deMarrais, Judith Preissle, Kathryn Roulston, & Elizabeth A. St. Pierre, 'Standards of Evidence in Qualitative Research: An Incitement to Discourse,' *Educational Researcher*, VOL. 36, NO. 1, 2007,

36, pp. 25-32.

[14] Mirka Koro-Ljungberg, Diane Yendol-Hoppey, Jason Jude Smith, & Sharon B. Hayes, '(E)pistemological Awareness, Instantiation of Methods, and Uninformed Methodological Ambiguity in Qualitative Research Projects,' *Educational Researcher*, VOL. 38, NO. 9, 2009, pp. 687-699.